



# 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T) 총회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④ - 프랑스

Nathalie Verdeil (프랑스 노동총연맹(CGTT) 최고운영위원)<sup>1)</sup>  
Sylvain Goldstein (프랑스 노동총연맹(CGTT) 자문위원)

## 제52차 CGT 총회 보고

- 총회 참석자: 938명의 조합원이 총회에 대표로 참석하였고, 이 중 여성은 416명(45%), 총회에 처음 참석한 조합원은 751명이었다.
- 조합원: 2017년 현재 총 조합원 수는 653,000명, 2018년 CGT에 신규 가입한 조합원 수는 34,981명으로 이 중 여성 가입자는 49%, 남성은 51%이며, 민간기업 종사자 비율은 57.89%, 공기업은 42.1%이다.
- 계획안 찬성표: 의제 1 68%, 의제 2 70.77%, 의제 3 70.49%, 의제 4 64.87%, 의제 5 78.86%, 계획안 전체에 대한 찬성 70.63%
- 새로운 집행위원회(CE)가 90%의 찬성표를 얻고 출범하였으며, 최고운영위원회(BC)는 위원 수가 12명으로 확대되었다. 필립 마르티네즈는 사무총장으로 재선되었다.

1) CGT의 최고운영위원회(Bureau confédéral: BC)는 전국단위 기구로서 차기 총회 개최시점까지 CGT의 활동을 관리·조직한다. CGT 위원장은 당연직 최고운영위원으로 선임되며, 최고운영위원회는 CGT 지도부의 공백 없는 역할 수행을 책임진다.

위원은 41~59세까지의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최고운영위원은 위원장인 필립 마르티네즈(Philippe Martinez) 외 파브리스 앙제이(Fabrice Angéi), 앙젤린 바르트(Angeline Barth), 파스칼 부비에(Pascal Bouvier), 다비드 뒤게(David Dugué), 비르지니 장셀-임브레치(Virginie Gensel-Imbrecht), 다비드 지스토(David Gistau), 베로니크 마르탱(Véronique Martin), 카트린 페레(Catherine Perret), 보리스 플라지(Boris Plazzi), 나탈리 베르데일(Nathalie Verdeil), 셀린 베르즐레티(Céline Verzeletti)이다.

## ■ 프랑스의 상황

제52차 CGT 총회는 노동조합 운동에 의문이 제기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 오늘날에는 노조단체 외부에서도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CGT 내부에서도 때때로 참여한 의견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의 권리에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상해야 하는지, 새로운 권리와 노동자 승리를 위해 어떠한 행동 노선을 취해야 하는지, 우버(Uber), 딜리버루(Delivroo) 등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만남을 어떻게 계획하고 이들을 어떻게 조직화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동세계에 보다 더 적합한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 CGT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이 CGT 앞에 산적해 있다.

CGT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여기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공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프랑스의 연간 탈세 및 조세회피 액수는 2013년 대비 20%가 증가한 1,000억 유로에 달하고, 이를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더하여 기업에는 ‘고용과 경쟁력을 위한 세액감면(credit d’impôt pour la compétitivité et l’emploi: CICE)’이라는 부당한 혜택을 남발하고 있는데, 정작 혜택을 받은 기업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얻지 못하면서 400억 유로의 세수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2016년에만 50억 유로의 국고수입을 가져왔던 소위 부유세인 ‘자산에 대한 연대세(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ISF)’를 폐지함으로써,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1945년 이래로 프랑스 국민들이 투쟁으로써 얻은 사회적 결실을 모두 포기하려 나서고 있으며, 노동자와 저소득층, 실업자, 퇴직자를 프랑스의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노동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는 노조와의 협의 없이, 국회와의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국가 연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업보험제도와 퇴직연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시도이다. 또 다른 공격은 보편적인 의료보험제인 기초의료보험제(Sécurité sociale)를 폐지하고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다.

## 실업보험제도 개편

정부의 실업보험제도 개편<sup>2)</sup>은 매우 가혹한 조치로 이미 생활고를 겪고 있는 노동자가 모든 정부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노동자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것이며, 이에 관리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중 가장 큰 타격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을 향하게 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CGT를 비롯한 노조들의 제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CGT는 실업수당 지급대상 선정기준을 하향 조정할 것과, 하청업체를 이용하여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대기업에 비용을 부담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제도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실업수당 지급대상 기준을 연속근로 4개월에서 6개월로 조정(약 30만 명의 실업자가 모든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됨).
- 실업수당 수급권 회복<sup>3)</sup>에 필요한 근무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에 따라 실업수당 수급권을 잃는 노동자가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만 57세 이상을 제외하고, 월 세전소득 4,500유로 이상인 관리직의 실업수당을 실업 기간 6개월 이후 30% 감액. 수백 명의 관리직이 이같이 개정된 정책의 적용을 받지만 이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눈속임에 지나지 않음.<sup>4)</sup> 경제인연합회(Medef)가 곧장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을 주장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직종 간 연대가 분열될 수 있음.<sup>5)</sup>

2) 2019년 7월 30일 실업보험제도 개편과 관련된 법이 통과되어,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사회적 임금으로 충당되었던 실업보험재정은 일반사회기여금(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이라는 명목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이제 노사합의 없이 단독으로 실업급여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종전식 실업수당 수급권(les droits rechargeables)제도에 의해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만료된 노동자가 새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재취업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인정받아 또 실직할 시 실업수당을 재수령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직 후 28개월 또는 36개월 이내에 재취업 시, 새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실업수당 수급기간이 연장된다.

4) 월 세전소득 4,500유로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매우 적고, 따라서 이러한 수당 개정으로 실업보험재정에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

5) 각주 2번에서 설명한 것처럼 실업보험재정이 세금으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단독으로 실업급여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노동자들간의 연대를 위협한다.

- 수천 명의 자영업자 및 자발적 퇴사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

## 퇴직연금제도 개편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해서 마크롱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연금 수령액 삭감이 바로 그것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 세 가지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법정 정년퇴직 연령은 62세로,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따라 62세에 퇴직한 국민은 62세부터 64세까지 10% 감액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64세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시기를 미루는 경우 퇴직연금이 증액된다. CGT는 이 같은 감액/증액되는 퇴직연금제도에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미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건강을 담보로 퇴직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포화된 노동시장에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의 상황을 악화시킨다. 셋째, 정년을 앞둔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어 퇴직연령 이전까지 수년간 무소득 실업상태에 놓일 수 있다.
- 다음은 퇴직연금액 산정에 점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반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이 가장 높은 25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고,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10년 동안의 평균 임금을 산출하여 퇴직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총 노동기간에 따라 산출하는 점수제로 개편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경력 초기에 시간제 근무로 저임금을 받았던 노동자는, 당시의 저임금이 연금액 산출식에 포함되어 자동으로 연금 수령액이 감액된다. 또한 특수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면, 직종별 특성을 고려한 퇴직연금제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잃게 될 것이다.

퇴직연금제 개혁에 따라 연금액이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 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회

이러한 상황에서 제52차 프랑스 노동총연맹(CGT) 총회는 2019년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디종(Dijon)에서 개최되었고, 참가자들이 전 세계 노조 조합원들과 노동 세계를 향하여 강력한 행동을 촉구하면서 모든 산하노조들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며 마무리되었다. 총회의 사전행사로 12일에는 전 세계의 노동조합 단체들이 함께 자리한 국제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날 토론회에는 CGT 전국연맹위원회(Comité confédéral national: CCN)<sup>6)</sup> 위원들과 함께 60개국에서 80개의 노조에서 노조대표 90명이 참석하여 불평등, 환경오염 및 부의 독점을 비롯하여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노동조건 개악과 동시에 강행되고 있는 긴축정책도 참석자들의 관심 주제로 논의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CGT의 소중한 가치인 연대를 넘어서, 자본주의가 세계를 잠식하고 있고 또 노동자들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그 현실을 고발하고, 이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일에 개최된 국제토론회뿐 아니라 15일에 개최된 국제회의는 각국의 대표단들이 CGT의 역할과 공동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시점에, ILO를 지지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터키와 팔레스타인, 방글라데시 조합원들과 노동운동의 국제적 합의점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아울러 일주일 동안 열린 제52차 CGT 총회를 통해 CGT 지도부의 지난 사업활동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향후 3년을 위한 사업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 2,800개의 미래사업을 위한 제안서가 제출되어 그중 절반이 채택되었고, 이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위한 사업안이 마련되었다. 총회에서 논의된 다섯 가지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노동의 현실과 미래

기술진보와 환경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여러 차례 다루어진 바 있고, 사회문제도 환경문제

6) 전국연맹위원회(Comité confédéral national: CCN) - CGT지도부를 구성하는 네 개의 기관 중 하나.

와 마찬가지로 해결이 시급하다. 아울러 CGT는 모든 여성과 남성의 인간해방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인식하고 여성주의 가치를 재천명하였다.

## 임금노동자의 새로운 지위

오래전부터 CGT는 임금노동자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완전한 사회보장, 즉 사회적 소득(salaire socialisé)을 기반으로 한 100% 사회보장을 위한 투쟁을 우선 의제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CGT는 모두를 위한 직업사회보장제(sécurité sociale professionnelle) 도입을 요구한다. 이 제도를 통해 그 어떤 노동자도 권리와 가치 인정의 단절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실업과 실업급여의 개념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 및 지속적인 경력개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2006년부터 CGT는 해고 노동자에게 재취업할 때까지 ‘급여(salaire)’를 지급할 것과, 청년들에게 대학·대학원 졸업 후 취업할 때까지 최저임금(SMIC)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복지사회와는 차별화되는 것으로, ‘완전고용’ 사회로 회귀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 보건부 및 경제부 산하 통계기구(DREES)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740만 명에 이르는 사회적 최소보장(Minima sociaux) 수급자 역시 적절한 소득지원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처럼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직업사회보장제 및 사회적 최소보장 수급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라는 두 가지 해결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보다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노동시장 재진입이 어려운 실업자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음 7가지 정책과제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 노동자가 직장을 옮기는 과정에서의 과도기에 이전 일자리에서 보장받았던 임금 및 노동조건, 그리고 비정규직의 경우 최상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새 직장에서도 동일한 권리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국가 지원금 수급 여부와 상관 없이 모든 실업자, 사회적 최소보장 ‘수급자’ 및 경력이 없는 취업준비생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노동자의 지위에 상관 없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자의 재취업 지원<sup>7)</sup>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동종 기업들 또는 특정 고용구역(Bassin d'emploi)<sup>8)</sup>에서 사회·재정적 책임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보장분담금 및 일자리 공공지원정책에 대한 재정지원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업사회보장기금'을 신설하여야 한다.
- 공공고용서비스를 개혁하여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직종 간(interprofessional), 직종 내(professional), 지역 내(territorial)에서 진정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CGT는 최저임금(SMIC)의 수준을 세전 월 1,800유로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이는 아래 사항에 대한 요구로 이어진다.

- 모든 임금 및 임금 테이블의 초임도 함께 인상
- 남녀 임금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마련
- 모든 임금노동자, 퇴직자, 실업자, 국가 지원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및 견습생을 위한 임금의 최저 기준 마련
- 고졸자 및 무경력자의 생애 첫 임금에 대한 기준 마련
- 기타 모든 소득요소를 배제하고 순수 임금만으로 현재의 생활조건에서 임금노동자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요건을 보장받기 위한 기준 마련
- 직종별 최저임금, 공무원 임금은 최저임금(SMIC) 이상으로 조정

마찬가지로 유럽 및 전 세계의 국가는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이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구매력과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하며, 경제성장의 결실을 노동자와 나누어야 한다. 이 같은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수준을 산정하고 인상하는 데에 각국의 경제

7) 노동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재취업까지 4~12개월 간, 사용자가 해고 이전 수준의 급여를 해고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

8) 일자리 존(zone d'emploi)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노동자의 직장과 거주지를 같은 지역에 위치하도록 하나의 단위행정 지역으로 묶은 것.

수준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계급투쟁 논쟁의 핵심인 사회적 임금(le salaire socialisé)

전체 임금에서 임금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직접임금 또는 *세후임금(salaire net)*이라고 한다. 나머지 임금은 사회보장분담금(cotisations)으로 고용주가 사회보장기구(Urssaf) 또는 실업보험기구(pôle emploi)에 납부한다. 이렇게 지급된 임금은 ‘공동기금’으로 병가, 출산·육아휴가, 가족 비용, 노동력 상실, 퇴직과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수요를 충족하는 데 사용된다. 간접임금인 이 임금은, *사회적 임금(salaire socialisé)* 또는 사회화 임금, 분배임금, 공공임금(appelé aussi salaire social, mutualisé, collectif ...)이라고도 불리며, 전체 임금의 40%에 해당한다.

*사회적 임금(salaire socialisé)*이 *유예 임금(salaire différé)*보다 더 적절한 용어로, 이 비용은 임금에 징수하는 세금 또는 비용의 개념이 아닌 미래를 위한 보험이자 투자로서 노동자의 임금이다.

이 같은 사회보장분담금은 현재 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 부과식 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가 오늘날 퇴직 인구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제도의 운영방식은 이와 다르며, 노동자 개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비용을 적립하고 있다.

퇴직자, 실업자, 병가자가 지급받는 수당은 과거 ‘자신의 임금에서 공제된’ 사회보장분담금을 환급받는 것이 아니다(과거 근로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 퇴직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들에게 이같이 연대를 기반으로 한 제도가 다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회보장분담금은 부의 재분배에 대한 정치적 결정에 따라 사용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임금은 보험처럼 각자가 부담한 만큼 돌려받는 것이 아니다. 납부할 분담금이 노동자의 임금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반면, 사회보장서비스의 혜택은 국민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 결정된다.

급여명세서상에서 사회적 임금은 ‘사용자 측 사회보장분담금’과 ‘노동자 측 사회보장 분담금’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 같이 비용 부담자를 사용자와 노동자로 구분한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 사용자 측 분담금 역시, 노동자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보상인 임금



의 총액에 포함되는 것이다. 노동자의 임금 실수령액을 사용자 측 임금(salaire patronal)이라고 칭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장분담금의 성격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마땅히 지급하고 있는 노동자 측 사회보장분담금의 성격과 다르지 않다. 사용자는 임금 실수령액과 각종 사회보장분담금이 포함된 임금비용을 책임짐으로써 이 논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사회보장분담금을 통해 임금노동자는 퇴직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고, 실업보험금, 병가보험금과 같은 각종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가족 '비용'의 일환인 가족수당을 부담할 수 있다.

## 권력관계의 형성

직종별, 기업 내 쟁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직종 간 단결을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52차 CGT 총회는 직종별 쟁의와 범직종 간 쟁의 사이에서 합의점을 재도출하고, 노조활동의 자유 침해 및 프랑스 경찰권력의 폭력 문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 문제는 사회발전을 위한 투쟁 및 인권보호, 민주주의적 자유를 위한 투쟁과 함께 우선 논의 의제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 노조 조직화 및 확대

CGT는 지위와 계급,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조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CGT는 청년 문제를 우선순위로 삼고, 청년들이 우리 노조에서 자기 자리를 찾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을 청년들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2018년 가을, 노란조끼 운동이 일터 밖에서 시작되었다. 퇴직자와 실업자,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처음으로 운동을 이끌었다.

마르티네즈 CGT 사무총장은 우선 CGT가 대표하지 않는 퇴직자와 실업자,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시위 현장에서는 얼마 안 가 충돌이 발생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상황이 보다 복잡해지기도 했다.

운동 초기 노란조끼 시위대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시위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프랑

스 경제인연합회(Medef)에서 의도적으로 세금과 (Medef가 사용자 측이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여기는, 그러나 앞에서 설명했듯이 사회적 임금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분담금에 대해 혼란을 야기하면서 노란조끼 시위대에 유류세에 대한 반발을 유발하였고, 이것이 ‘노란조끼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CGT는 이 같은 Medef의 주장을 근거 삼아 운동에 동참할 수는 없었다. 프랑스의 모든 노조는 사회보장분담금을 사회적 임금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 이념과 동떨어진 Medef의 입장에 힘을 실어줄 수는 없었다. 또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자 하는 극우 운동가들이 일부 시위대에 접근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마르티네즈 사무총장은 “CGT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극소수가 하는 주장에 놀라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노란조끼 운동은 CGT의 참여 없이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 CGT는 소외받는 노동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CGT가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강화할 수 있었다.

## 유럽 및 국제 현안

유럽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결집과 단결을 통해 범국가적인 공동 합의안을 타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CGT는 조합원들이 모든 국제 현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산하기구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회 3일 차에는 ‘노동의 진화 및 노조활동, 유럽과 국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CGT 대표들은 활동방향이 CGT와 실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세계노동조합연맹(World Federation of Trade Union: WFTU)의 사업 활동을 참고한 안을 사업계획에 다시 포함시켰다. 그 내용은 유럽노동조합연합(European Trade Union Confederation: ETUC),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 또는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한 모든 노동조합을 결집하고자 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CGT 대표 위원들은 본 총회에 초청받아 전 세계에서 참가한 노조대표들을 기립으로 맞이한 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 터키, 방글라데시, 말리를 비롯한 국가들의 노조 및 활동가들과 여러 국제 노조가 함께 이끈 구체적인 연대 활동에 관하여 발제하였다. 참석자들

은 ‘국제적 연대활동 강화’는 CGT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서, ‘세계화된 자본주의’가 낳은 사회문제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럽 및 세계 노조들의 끈끈한 단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한 국가 안에서의 투쟁은 전 세계화된 자본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힘의 질서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라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요구와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인간존엄을 보장하는 이민정책’을 거부하는 정부에 맞서 이민자들과 연대, 사회적·환경적 덤핑에 대한 투쟁, 새로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같이 “ETUC와 ITUC는 효과적으로 힘의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CGT의 목표는 산업, 지역, 기업의 틀 안에서 요구사항의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며, 이는 “ETUC 또는 ITUC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노조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단결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에, 두 노조연맹은 “우리의 투쟁에서 합의점을 찾는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관하여 6월 17일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ILO 창립 100주년 총회와 같이 “모든 국제 노동연맹이 노조 단결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는 하나로 통합된 틀을 마련하여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을 결집하고 권리 요구 투쟁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 ■ 국제적 연대활동

CGT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국제적인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스라엘 식민 점령에 맞선 투쟁이 바로 그 예로, 팔레스타인 노조총연맹(Palestinian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PGFTU)의 사무총장 샤에르 사에드(Shaer Sa'ed)는 본 총회에 초청받은 자리에서 국제법과 기본적인 인권을 유린하는 이스라엘의 만행을 저지하기 위해 국제적인 연대의 필요성을 재강조하였다.

또한 CGT는 프랑스-팔레스타인 연대조합(Association France Palestine Solidarité: AFPS) 및 기근 퇴치 및 발전을 위한 천주교위원회(Comité Catholique Contre la Faim et pour le Développement: CCFD)와 협력하여 ‘프랑스 은행들과 이스라엘 식민화 사이의 위험한 관계를 반대하는 운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CGT 금융보험노조(CGT banques et

assurances)의 코린 페레이라(Corinne Ferreira)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제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금융체제가 팔레스타인 식민화의 핵심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다수의 연대 기구에서 진행한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스라엘 은행과 프랑스 은행(BNP Paribas, Société Générale, Crédit Agricole, BPCE AXA) 사이의 금융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제 연대의 예로 1990년대 말부터 르노(Renault)의 일부 생산라인이 이전된 르노 터키 지부 노동자들과의 활동 사례가 발표되었다. 총회에 참가한 터키 금속노련 디스크 메탈(Disk Metal)의 예융 외제르(Eyüp Özer)는 사용자가 ‘황색 노조’<sup>9)</sup>를 강제하고 저항 활동가를 억압·해고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약 6천 명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대하여 설명했다. 관련해서 CGT 르노의 파비앙 가쉬(Fabien Gâche)는 CGT가 르노 터키 지부 노동자들을 만나 지부에서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연대하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투쟁의 끝은 멀기에, 예융 외제르는 “노동자가 기본권을 행사할 자유를 획득하는 데 국제적인 연대가 필수적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와 상황은 다르지만 비슷한 연대를 보여준 방글라데시의 섬유 노동자들의 쟁의도 언급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인 섬유산업은 노동자들의 인간적인 삶을 파괴하고 있다. 2013년 4월 24일,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로 인하여 1,2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사망하였고, 2,500명이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인 다카에서 온 방글라데시 섬유노조연맹(National Garment Workers Federation: NGWF) 위원장 아미룰 하크 아민(Pour Amirul Haque Amin)은 라나 플라자 붕괴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용자의 방만’이 초래한 노동자 살인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대형 의류유통 브랜드뿐만 아니라 ‘공장 소유자와 정부’에 있다고 비판하였다. 국제적인 단결, 특히 CGT의 노력 덕분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책임자들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 신장을 의무화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아미룰 하크 아민 위원장은 전 세계 노동자를 위한 사회적 권리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본 총회에서는 다국적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과 다국적기업 및 직종별 연대 활

9) 사용자에게 예속된 노조.

동을 소개하고, 그 예로 말리 CGT 철도노조를 위한 행동 및 재정지원을 언급하였다. 말리의 철도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말리의 수도인 바마코와 세네갈의 수도인 다카르를 연결하는 노선이 퇴락하여, 철도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하여 10개월 넘게 투쟁을 벌였고, 바로 얼마 전에 투쟁에서 승리했다.

## ■ 국제적인 연맹에 관한 논의 및 개정안

총회에 초청받은 ITUC<sup>10)</sup> 부사무총장 오웬 튜더(Owen Tudor)와 ETUC 총장 루카 비젠티니(Luca Visentini)는 전 세계 노동자들을 겨냥하는 공격과 사회적·환경적 덤핑에 맞서 초국가적인 노조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대를 통해 경쟁 세력을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CGT의 국제협력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995년 CGT는 행동방침과 전략 차원에서 WFTU를 탈퇴하고 1999년에는 ETUC에, 2003년에는 ITUC에 가입하였다. 일각에서는 ETUC와 ITUC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고, ‘자본에 맞서지 않는다’라고 비판하는 한편, 일부 참석자들은 ETUC 총회에서 내세워야 할 CGT의 정책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한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의 사무총장 로랑 베르제(Laurent Berger)가 ETUC의 차기 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CGT 지도부 위원 보리스 플라지(Boris Plazzi)는 로랑 베르제가 순차적으로 맡게 되는 ETUC 위원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무총장직과는 달리 실질적인 집행권이 없지만 영광스럽고 상징적인 직책이라고 설명하며, “CGT는 당연히 ETUC 위원회에서 CGT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위원회의 제안대로 CGT가 “ETUC와 ITUC, 또는 WFTU 가입 여부를 떠나 가능한 모든 노조와 교류·단결하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획안을 채택하였다. 플라지 위원은 CGT가 열린 조직으로 거듭나고 다른 노동쟁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KLI**

10) 국제노동조합연합(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